

한국 사회문제의 변화: 지난 10년간 세 시점의 비교

한 덕 응^{*}

최 훈 석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한국 사회에서 최근 중요한 사회문제들을 알아내고 1994년과 1999년 시점에서 수행된 선행 연구 한덕웅 1994; 한덕웅·강혜자, 2000의 결과들과 비교하여 지난 10년 동안 세 시점에서 일관되게 중요한 사회문제들은 무엇이며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알아냈다. 2004년에는 모두 37개의 사회문제의 목록을 사용하여 전국 5개 지역의 1600명(대학생 812명, 장년 788명)에게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의 과반수가 세 시점에서 일관되게 중요하다고 평가한 사회문제들은 1)정치인 부정부패/부조리, 2)환경오염, 3)입시위주 교육 그리고 4)지방대 출신 취업난이었다. 2004년 시점에서 조사 대상의 과반수 이상이 중요하다고 지각한 사회문제들은 1)높은 실업률, 2)정치인 부정부패/부조리, 3)환경오염, 4)입시위주 교육, 5)취업난, 6)국민의 정치불신, 7)서민 생활고, 8)정치적 무능, 9)신용불량자, 10)지방대 출신 취업난, 11)정치 불안, 12)공무원 부정부패였다. 이 결과로부터 최근에 경제와 아울러 정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반응한 사람들의 백분율이 1994년과 1999년의 두 시점보다 높아졌음을 알아냈다. 세 시점에서 모두 반응의 백분율이 5% 안에 포함되는 사회문제들만을 가려내어서 시점간 백분율 순위의 상호단순상관을 산출한 결과를 보면 된 간격으로는 순위상관이 유의했으나 10년 간에는 순위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5개의 중요한 사회문제들에서 지난 10년 사이에 중요도 순위에서 큰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들이 나타난 원인 혹은 배경이 되는 요인들과 아울러 중요한 해결 방향을 검토하고 장래 연구의 과제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사회문제, 한국사회, 사회문제의 지속, 사회문제의 변화

*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와준 성균관대 심리학과 이경순 강사와 자료수집에 협조해주신 김교현 교수(충남대), 성한기 교수(대구가톨릭대), 윤창영 박사(대구대), 이종구 교수(대구대), 강혜자 교수(전북대), 박군석 박사(한림대), 박희량 박사(전북대), 이민규 교수(경상대), 김철민 교수(광주대), 김금미 박사(성균관대), 신강현 교수(아주대), 한영석 박사(광운대) 교수께 감사한다

† 교신저자 : 한덕웅,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종로구 명륜3가 53

E-mail : dwhahn@skku.edu

본 연구는 2004년 시점에서 한국의 국민들이 장차 살기 좋은 사회를 이룩하려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사회문제들을 알아내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아울러 연구 결과들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과 조사의 대상이 매우 유사한 선행 연구(한덕웅, 1994; 한덕웅·강혜자, 2000)의 결과들과도 비교하여 논의하려고 한다. 2004년에 얻은 조사결과를 이 선행 연구들과 비교하게 되면 지난 10여년 간 세 시점에서 국민들이 인식하는 사회문제들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알아낼 수 있다.

심리학 분야에서 한국 사회가 지니고 있는 중요한 사회문제들을 알아내기 위한 연구들은 최근까지도 드물다. 한국의 사회심리학에서는 최근까지 한국사회가 지니고 있는 중요한 사회문제들의 성질을 이해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제를 소홀하게 다루었다. 이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한다면 학자들이 전공하는 영역에 따라서 관심을 갖고 있는 현실의 여러 사회문제들을 부분적으로만 다루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개인내과정, 대인과정, 집단간 관계를 다루면서 전체 사회 수준의 쟁점들에 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국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문제들을 포괄하여 균형있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 사실은 한국의 사회심리학자들이 사회의 수준에서 한국사회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의 사회학이나 심리학의 사회심리 분야에서 한국 사회문제의 특징들을 알아내려는 연구들이 소수에 불과하면서도 이 연구들은 몇가지 공통되는 한계들을 지닌다. 먼저 지금까지 이 주제를

다룬 소수의 연구들도 한국 사회의 사회문제들을 범주들로 분류하면서 대체로 미국사회에서 자주 나타나는 중요한 사회문제들의 분류 범주들을 사용했다. 이 때문에 한국의 현실에서 중요한 사회문제들을 알아낸데 근거를 두고 한국사회에 적합하도록 적실성이 높은 사회문제의 분류체계가 마련되지 못하였다. 한국사회에서 한국인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사회문제의 범주들을 찾아내고 이 범주들에 따라서 각 사회문제의 현상을 기술하고, 원인들을 추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 연구들은 지금까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에서 사회문제를 다룬 사회학 분야의 연구들 가운데 저술(예: 고영복, 1990)이나 조사연구(예: 최명·권태환·홍두승, 1989; 현대사회연구소, 1993)에서도 이와 같은 추세가 보인다. 이 두 연구에서 나타난 사회문제의 범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고영복(1991)의 연구에서는 도시, 노사, 빈곤, 범죄, 가족, 여성, 청소년, 노인, 환경, 인구, 보건의료, 여가, 부정부패, 지역감정, 학력주의, 의사종교의 16개 범주에 따라서 구분하였다. 고영복은 이 가운데 한국적 특수문제로는 부정부패, 지역감정, 학력주의 및 의사종교가 포함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저서에서 사회문제의 범주별로 저자들이 서로 달랐는데 각 사회문제를 다룬 학자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의식과 접근법에 따라서 국내외의 현상을 다분히 주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최명 등(1989)의 조사연구에서는 소득격차, 공해, 부정부패, 인구문제, 사치풍조, 가치관혼란, 범죄문제, 주택, 부동산투기, 노인, 노사분규, 도박, 비밀과외의 13개 범주를 사용하여 각 범주의 사회문제가 중요하다고 반응한 백분율을 얻었다. 이 연구들에서는 공통으로 미국의 학자들이 미국사회

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문제의 분류 범주들을 사용하고 이 틀 안에서 한국사회에서 특수하게 나타나는 중요한 범주들을 몇 개 추가하여 현상을 파악하거나 혹은 조사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이 범주들이 한국에서 중요한 사회문제들을 분류하는데 있어서도 역시 타당성이 높고 적합한지 물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사회상을 파악하는데 이 사회문제의 범주들이 문화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 알 수 없어서 실제로 외적 타당성을 지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사실 한국의 사회과학계 전반과 유사하게 사회심리학에서도 지난 날 한국사회를 연구하는데 소홀하였고 최근에도 이 추세는 여전하다. 외국에서도 심리학적 사회심리학에서는 특히 사회와 문화 수준의 현상을 다루는데 소홀하여 연구자들이 실제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회나 문화를 이해하고, 설명하고, 개선하는데 무력하여, 사회 수준에서 이른바 사회심리학의 정체성 논쟁이 쟁점이 된지도 오래되었다(예: Israel & Tajfel, 1972). 사회심리학의 정체성 논쟁에서 사회 수준의 현상들을 다루지 못하게 된 배경 요인으로 접근의 관점과 연구 방법의 한계도 중요하다. 사회심리학에서 소위 인과관계를 해명하기 위한 실험 방법의 한계로 인해서 개인내과정이나 대인과정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아울러 사회나 문화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한 무관심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사회 수준의 중요한 현상들에 대한 폭넓은 조망이 없이 연구자가 개인으로 관심을 갖는 몇 가지 주제들만을 다루게 되었다. 그러나 이보다 적극적으로 한국 사회가 지니고 있는 과제들을 포괄하여 연구하게 되면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서 사

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필자와 공동 연구자들(한덕웅, 1994; 한덕웅·강혜자, 2000; 한덕웅·최훈석·강혜자·이경성·박군석, 1995)은 선행연구에서 한국의 대학생과 장년들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가 지니고 있는 중요한 사회문제들을 두 차례에 걸쳐서 연구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중요한 사회문제들을 자유반응으로 얻어서 세분된 목록을 마련하고, 조사한 자료를 사용하여 사회문제의 분류 범주들을 작성하였다. 이 기법으로 세분된 목록을 얻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특히 한국사회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사회문제들을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적합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경험을 토대로 2004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들을 기존의 목록에 추가하여 최근 한국의 사회문제들을 알아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들을 1994년과 1999년의 두 시점에서 실시했던 조사의 결과들과 비교하여 한국사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지속되거나 변화된 중요한 사회문제들을 알아내려고 한다. 그리고 이 비교를 통해서 지난 10년간 중요한 사회문제별 추세가 나타난 배경을 알아보고, 장차 사회문제의 개선에 필요한 요건들도 논의 하려고 한다.

방 법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도 1994년과 1999년 두 시점에서 수행된 선행 연구(한덕웅, 1994; 한덕웅·강혜자, 2000)에서 사용한 조사 기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조사 대상도 지역별, 성별, 교육수준 및 연령 등에서 위의 두 시점과 유사한 비율이 되도록 구성하여 조사를 수행했다. 1994년 조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개선해야 될 사회문제들을 총 222명의 대학생과 학부모가 각자 최고 20개까지 자유반응으로 기술하도록 했다. 이 자료에서 얻은 사회문제들의 내용을 분석해서 27개 대범주에 속하는 730개 사회문제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반응 빈도와 내용의 독립성을 근거로 최종적으로 336개 사회문제 문항들로 이루어진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였다. 1999년 조사에서는 1994년 조사에서 사용했던 336개의 사회문제 목록을 모두 포함하고 1999년 시점에서 부각된 사회문제들을 추가하여 355개의 사회문제 목록을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1994년과 1999년 두 시점에서 조사된 사회문제들을 모두 포함하고, 여기에 최근에 부각된 사회문제 15개를 추가하여 총 370개 사회문제 목록을 만들었다. 본 조사에 추가된 15개 사회문제들은 심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15명에게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문제

문항들 이외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문제를 자유반응으로 기술하도록 하여 얻은 자료를 내용분석하여 얻었다. 본 연구에서 추가된 사회문제 문항들은 부록1의 문항번호 앞에 +표로 표시했다. 응답자들은 370개 문항들로 이루어진 사회문제 목록에서 “한국사회를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항들”을 수에 제한 없이 밑줄을 그어서 가려냈다. 조사는 2004년 12월과 2005년 2월에 걸쳐 실시했다.

조사대상

조사의 대상은 2000년 인구센서스 통계청 통계 조사국 인구통계과) 자료를 참고로 지역별, 성별, 교육수준 및 연령 등의 차원에서 선행 두 시점(한덕웅, 1994; 한덕웅·강혜자, 2000)과 유사한 비율이 되도록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했다. 조사대상은 서울, 중부, 영남, 호남, 강원도의 5개 지역별 표본을 정하여 할당했다. 지역별 조사 대상들의 소속 대학교는 서울지역에서 성균관대, 광운대, 성신여대, 중부지역

표 1. 본 연구(2004)와 선행연구(1999, 1994)의 조사 대상자의 수와 백분율

조 사	대 상	2004년(%)	1999년(%)	1994년(%)
연 령	대 학생	812(50.8)	901(50.9)	914(50.4)
	일 반	788(49.3)	870(49.1)	898(49.6)
성 별	남 자	745(46.6)	898(50.7)	1058(58.4)
	여 자	851(53.2)	873(49.3)	754(41.6)
지 역	서 울	615(38.4)	661(37.3)	686(37.9)
	중 부	385(24.1)	378(21.3)	373(20.6)
	영 남	327(20.4)	409(23.1)	424(23.4)
	호 남	230(14.4)	235(13.3)	241(13.3)
	강 원	43(2.7)	88(5.0)	88(4.9)
전 체		1600(100.0)	1771(100.0)	1812(100.0)

은 아주대, 충남대, 호서대, 영남지역은 경상대, 대구대, 효성가톨릭대, 호남 지역은 전북대, 광주대 그리고 강원지역에서 한림대가 포함되었다. 조사는 선행 연구와 동일하게 먼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 대학생들이 자신의 부모나 후견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장년층 대상의 자료를 수집했다. 불성실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된 조사 대상은 서울지역 615명, 중부지역 385명, 영남지역 327명, 호남지역 230명, 강원지역 43명으로 총 1600명이었다. 본 연구와 선행 연구의 조사 대상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전체 응답자들의 연령 평균은 33.4세(표준편차=13.2)였으며, 대학생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21.7세(표준편차=2.8), 장년 응답자들의 평균연령은 44.7세(표준편차=8.8)였다. 장년층 조사 대상의 직업은 주부(29.0%), 회사원(20.1%), 상업(16.4%), 공무원(4.9%), 개인사업(6.1%), 교직(5.4%), 농업(1.5%), 은행원(0.7%), 무직(2.1%), 기타(13.8%)였다. 조사대상이 지닌 인구통계변인별 분포는 여성이 약간 많이 표집된 것만 제외하면 선행 두 시점과 매우 유사하다.

자료분석

선행연구(한덕웅, 1994; 한덕웅·강혜자, 2000)와 동일한 절차를 사용하여 분석했다. 먼저 연령, 성별 및 지역별로 각 사회문제에 대한 응답을 백분율로 산출했다. 전체 조사 대상의 반응 백분율은 성별 및 연령별로 얻은 백분율들의 평균으로부터 산출하여, 이 변인별 사례수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제거했다. 연령별, 성별 및 지역별 반응 백분율 차이와 이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Log-Linear 분석을 사용하여 검증했다. 본 조사에 포함된 370개 문항들에 대한 조사 대상의 전체, 연령별, 성별

및 지역별 반응 순위와 백분율 및 이 변인들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부록1에 제시하였다. 이 부록에는 370개 모든 사회문제들에 대해서 전체 반응의 백분율은 물론이고 연령, 성별, 지역별 백분율도 실었으므로 1994년과 1999년 시점에서 수행된 선행 연구들에서 얻은 조사의 결과와 비교하여 독자마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문제들에서 시점별로 어떤 변동 추세가 나타났는지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 및 논의

사회문제 지각의 전반적 특징점

사회문제들의 영역별 분류

1994, 1999, 20004년 세 시점별로 전체 응답자의 30% 이상이 중요하다고 지각한 문항들을 사회문제 영역별로 분류하고, 50%이상, 40%이상, 30%이상의 반응 백분율을 보인 사회문제의 빈도를 각각 산출한 자료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이 자료를 보면, 세 시점에서 전체 응답자들의 30% 이상이 지각한 사회문제의 수가 각각 184개, 109개, 100개로 나타나서 지난 10년간 전체에서 1/3 정도 이상의 국민들이 중요하다고 지각한 사회문제의 수와 영역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치영역의 사회문제는 1994년부터 1999, 2000년에 이를수록 점차 빈도가 감소해서 국민들이 최근 소수의 정치 문제들에 큰 관심을 보임을 시사한다. 이와 달리 경제, 행정, 사회문화 영역에 포함되는 사회문제의 수는 1994년에 비해서 1999년에 감소하다가 2004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표 2. 전체 조사대상이 중요하다고 본 문항들의 사회문제 영역별 분류

사회문제영역	50% 이상			40%~50% 미만			30%~40% 미만			계		
	2004	1999	1994	2004	1999	1994	2004	1999	1994	2004	1999	1994
정치	4	4	1	4	5	6	3	7	14	11	16	21
행정	1			1	5	2	9	4	13	11	9	15
외교	0			1		1	1	1	2	2	1	3
환경	1	1	4	0	3	2	5	4	4	6	8	10
경제	4	1	1	6	2	5	3	6	13	13	9	19
교육	2	2	4	6	1	5	2	8	12	10	12	21
치안	0		2	2	1	2	2	3	1	4	4	5
교통	0		1	2	1	3	1	3	2	3	4	6
지역차별/감정	0			1	1	2	1	2	1	2	3	3
빈부격차	0			0	2	2	0		2	0	2	4
농촌	0		1	0		3	3	3	5	3		9
청소년	0	1	1	0	3	4	7	2	4	7	6	9
사회문화	0		1	2	5	11	19	13	13	21	18	25
노인	0			1	1	2	1		1	2	1	3
의료/보건	0			1		1	1	2	8	2	2	9
과학기술	0			0		1	0	1	2	0	1	3
언론	0			1	1	1	0		4	1	1	9
사법	0			0			0	2	3	0	2	3
주택	0			0			0		2	0		2
종교	0			0			0	2	3	0	2	3
여성	0			0			1	2	3	1	2	3
사회복지	0			1		1	0	3	2	1	2	3
총계	12	9	16	29	32	54	100	68	114	100	109	184

최근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들

1994, 1999, 2004년 세 시점에서 전체 조사 대상의 50% 이상이 중요하다고 본 사회문제들은 표 3에 제시하였다. 2004년 조사에서 전체의 50% 이상이 지적한 사회문제는 모두 12

개였는데, 문항의 반응 백분율에 따라서 순위별로 보면 1) 높은 실업률(68.3%), 2) 정치인 부정부패(67.6%), 3) 환경오염(66.6%), 4) 입시 위주교육(61.4%), 5) 취업난(58.3%), 6) 국민의 정치불신(51.5%), 7) 서민생활고(51.3%), 8) 정

		2004				1999				1994			
		전체	학생	장년	전체	학생	장년	전체	학생	장년	전체	학생	장년
정치행정	정치인의 부정부패/부조리	< 267.6	< 272.2	< 283.1	< 175.3	< 278.1	< 172.5	< 266.9	< 271.1	< 262.7			
	공무원 부정부패/부조리	< 1249.9	< 1452.5	< 1247.2	< 365.3	< 368.0	< 382.7	< 384.4	< 5144.9	< 3544.0			
	권력형 비리/부당한 관공제입	< 3939.6	< 3044.8	< 5534.4	< 751.7	< 954.5	< 949.0	< 4244.0	< 4346.1	< 4441.9			
	국민의 정치불신	< 651.5	< 1052.6	< 850.4	< 3542.1	< 3943.0	< 2941.4	< 5042.6	< 4645.8	< 5989.9			
	정치적 무능	< 851.1	< 753.9	< 1148.1	< 850.8	< 857.4	< 1944.0	< 13932.0	< 14194.5	< 15489.5			
환경공예	정치불신	< 1150.1	< 853.8	< 1346.1	< 5237.9	< 6338.2	< 4137.7	< 21727.0	< 22427.0	< 15427.0			
	환경오염	< 366.6	< 370.2	< 363.1	< 275.1	< 178.4	< 271.9	< 179.5	< 183.0	< 175.8			
	식수오염	< 5736.1	< 6237.6	< 5334.8	< 2145.5	< 3743.2	< 1048.0	< 460.8	< 860.8	< 360.8			
	산성폐기물/중장제수처리	< 8232.3	< 8832.4	< 7632.2	< 2943.7	< 3643.3	< 1844.2	< 560.7	< 564.3	< 587.0			
	대기오염	< 4438.6	< 5139.5	< 3837.7	< 3442.2	< 5140.7	< 2043.8	< 856.0	< 958.0	< 763.9			
교육	임시위주교육	< 461.4	< 468.0	< 535.2	< 439.2	< 467.2	< 651.2	< 660.7	< 368.3	< 852.9			
	지방대 출신 취업난	< 1050.3	< 1850.0	< 650.8	< 949.8	< 1352.2	< 1247.4	< 1549.7	< 2051.8	< 1647.6			
	교육의 형평성/교육 개혁	< 1647.2	< 657.8	< 4136.7	< 2045.6	< 757.6	< 6633.3	< 1449.7	< 762.5	< 7696.8			
	대학입시지옥	< 1547.2	< 1751.6	< 1843.0	< 5337.3	< 1649.6	< 4042.5	< 1649.6	< 1952.6	< 2146.4			
	높은 실업률	< 168.3	< 172.3	< 164.5	< 539.0	< 682.9	< 455.1	< 7139.1	< 11337.4	< 4941.8			
경제	취업난+	< 538.3	< 561.5	< 455.5									
	서민생활고	< 751.3	< 1352.5	< 750.6	< 2744.2	< 3443.8	< 1744.6	< 9836.3	< 13533.3	< 6637.2			
	신용불량지+	< 950.5	< 1152.6	< 1048.4									
	중소기업도산	< 8132.8	< 9032.1	< 6533.3	< 4638.9	< 3144.6	< 7032.6	< 1250.4	< 1495.0	< 2445.7			
	농수산물수입 개방/우트라이몬드	< 22519.1	< 20521.6	< 25116.8	< 24718.2	< 28315.2	< 20121.4	< 1051.4	< 1257.0	< 2645.8			
청소년	김대중 집/장마+	< 6635.0	< 5638.7	< 7931.5	< 636.9	< 582.9	< 750.7						
	청소년 가치혼란	< 5336.5	< 6337.4	< 4835.5	< 2843.9	< 1549.9	< 4037.8	< 1131.3	< 1057.6	< 3345.0			
지인/범죄	교통체중/교통난/낮은 도로율	< 2941.4	< 3343.6	< 3039.1	< 3741.6	< 3938.6	< 382.0	< 466.2	< 457.8				
	성범죄증가/여성지안부제	< 2046.2	< 1651.7	< 2241.4	< 3242.8	< 2247.8	< 4237.7	< 757.0	< 685.5	< 951.5			
사회문제	강력범죄/중앙화	< 4338.9	< 4739.9	< 3638.2	< 8033.3	< 12430.2	< 5036.5	< 1350.2	< 2749.8	< 1150.7			
	사회문제 부수증가/사회문제/사회문제	< 7034.1	< 7534.5	< 6134.0	< 1546.8	< 4342.1	< 551.7	< 552.6	< 3146.6	< 656.7			

표 3. 전체 조사 대상의 50% 이상이 세 시점을 가운데 한 번 이상 중요하게 본 사회문제들에 대한 반응을 변화 (+표시는 과 시점에서 새로 추가된 문항)

치적 무능(51.1%), 9) 신용불량자(50.5%), 10) 지방대 출신 취업난(50.3%), 11) 정치불안(50.1%), 12) 공무원 부정부패(49.9%)의 순서였다. 이 결과로부터 2004년-2005년 현재 한국인들 가운데 다수가 특히 중요하다고 지적한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들로는 경제(실업, 취업난, 서민생활고, 신용불량자)와 아울러 정치문제(부정부패, 불신, 무능, 불안)가 가장 두드러지고, 교육(입시위주교육, 지방대 출신 취업난 분야 두 개, 행정(공무원 부정부패) 및 환경(환경오염)에서 각각 하나씩의 사회문제들이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2004년-2005년 시점에서 경제와 정치 분야의 사회문제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 이전 두 시점과 비교해 정치부패/부조리, 환경오염, 입시위주교육은 지난 10년간 지속해서 최상위 순위의 사회문제로 지적됨으로써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반면에, 국민의 정치불신, 정치적 무능, 정치 불안, 높은 실업률, 서민생활고 등은 10년 전에 비해서 오히려 상황이 매우 악화되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2004년 조사에 새로 추가한 사회문제들 가운데 취업난, 신용불량자와 같은 민생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지적되어서 경제의 침체로 인한 기층민들의 어려움이 반영되었다. 권력형 비리, 부당한 관권개입, 공무원 부정부패/부조리는 1994년도에 비해서 1999년에 감소했다가 2004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표 3에서 1994년, 1999년, 그리고 2004년 세 시점에서 모두 조사 대상의 과반수 이상이 중요한 사회문제라고 일관되게 지적한 4개의 항목들을 볼 수 있다. 이 사회문제들은 정치인 부정부패/부조리(2004년 67.6%; 1999년 75.3%; 1994년 66.9%), 환경오염(2004년 66.6%; 1999년

75.1%; 1994년 79.5%), 입시위주교육(2004년 61.4%; 1999년 59.2%; 1994년 60.7%), 그리고 지방대 출신 취업난(2004년 50.3%; 1999년 49.8%; 1994년 49.7%)이었다. 다른 사회문제들이 10년 동안 혹은 5년 동안에 중요하다고 평가한 사람들의 백분율에서 시점 간에 큰 차이를 보였지만 이 사회문제들은 한국인들 다수가 반드시 해결하여야 한다고 지속해서 합의하는 핵심 과제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표 3에서 2004년에 중요하다고 평가한 백분율은 높지만 1999년이나 1994년에는 백분율이 낮아서 특히 최근에 중요성이 높아진 사회문제들도 볼 수 있다. 또한 2004년도에 조사 대상의 50% 이상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12개의 사회문제들 가운데 세 시점에서 모두 조사가 이루어진 10개의 사회문제들이 각각 1994년과 1999년을 거치면서 백분율에서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는 부록 2에 제시한 그림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그림들 가운데 정치불안과 높은 실업률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세 시점에서 선형관계로 점차 더욱 악화되어서 백분율이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 서민생활고 역시 백분율은 이보다 낮지만 실업률과 유사한 백분율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정치적 무능에서는 1994년(39.0%)에는 백분율이 낮았지만 1999년과 최근에는 일관되게 50% 이상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국민의 정치불신에서는 1994년(42.6%)과 1999년(42.1%)에 유사했으나 최근에 악화되면서 2004년 (51.5%)에는 높아졌다. 이와 달리 환경오염은 1994년(79.5%) 이후 점차 낮아져서 (1999년 75.1%, 2004년, 66.6%)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정치인 부정부패/부조리와 입시위주 교육에서는 세 시점에서 모두 60%를 넘거나 60%에 근접한 백분율을 일관되게 보여서 개선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방대 출신의 취업난 역시 세 시점에서 모두 50%대로 변화가 없었다. 공무원 부정부패는 1994년(44.4%)에 비해서 1999년(65.3%)에 높아졌다가 2004년(49.9%)로 다시 낮아졌다.

지난 10년 동안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의 변화 추이

각 시점에서 조사 대상의 50%이상이 각기 중요하다고 지적한 사회문제들만을 가려내어서 지난 10년간 세 시점별 특징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04년에 50% 이상의 반응율을 보인 문항들은 1) 높은 실업률, 2) 정치인 부정부패/부조리, 3) 환경오염, 4) 입시위주교육, 5) 취업난, 6) 국민의 정치불신, 7) 서민생활고, 8) 정치적 무능, 9) 신용불량자, 10) 지방대 출신 취업난, 11) 정치 불안, 12) 공무원 부정부패/부조리의 12개 문항들이었다. 이로 보면 2004년 시점에서 한국사회는 경제문제와 정치문제가 각각 4개씩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교육과 환경 문제가 포함되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1999년에는 1) 정치인 부정부패(75.3%), 2) 환경오염(75.1%), 3) 공무원 부정부패/부조리(65.3%), 4) 입시위주교육(59.2%), 5) 높은 실업률(59.0%), 6) 집단따돌림/왕따(56.9%), 7) 권력형 비리/관권개입(51.7%), 8) 정치적 무능(50.8%), 9) 지방대 출신 취업난(49.8%)에서 50% 이상의 반응을 보였다.

2004년도에 1999년도의 50% 이상이 반응한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를 비교해서 요약해보면 경제문제는 최근에 크게 심각해지고, 정치와 교육문제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환경, 사회/문화 영역의 사회문제들은 덜 지적되었다.

한편 2004년도와 1994년의 10년간 세 시점에서 50% 이상이 반응한 사회문제들이 어떤 차이를 보이며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난 배경은 무엇인지 논의해 보자. 1994년 시점에서는 조사대상의 50% 이상이 지적한 사회문제들이 16개가 되었다. 그 내용을 2004년과 비교해 보면 1994년도에는 경제와 정치문제들이 각각 하나씩만 포함되었으나 2004년도에는 각각 4개씩 지적되어서 지난 10년 동안 이전의 두 시점들보다 현재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되었다. 이 결과들 가운데 1994년도 경제문제에는 중소기업 도산(12위, 50.4%)만 포함되었는데 2004년에는 노무현 정권이 성립된 이후 높은 실업률(1위, 68.3%), 취업난(5위, 58.3%), 서민생활고(7위, 51.3%), 신용불량자(9위, 50.5%)의 네 가지가 매우 높은 순위로 포함되었다. 1994년이나 1999년과 달리 특히 최근에 경제문제가 심각해진 배경에는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신용카드 불량자가 많아지고 부실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공적자금의 투입 등에 따라서 나타난 어려움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1960년대 이후 지속해서 경제성장을 추구하던 정책, 복지 및 재분배 정책 등에서 개혁을 시도하면서 기업과 근로자의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의 변화에 따른 일관성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시기적으로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른데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치 분야 역시 1994년도에 50% 이상이 지적한 사회문제는 단지 정치인의 부정부패/부조리(2위, 66.9%) 하나였다. 그러나 1999년에는 정치인 부정부패(1위, 75.3%), 공무원 부정부패/부조리(3위, 65.3%), 권력형 비리/관권개입(7위, 51.7%), 정치적 무능(8위, 50.8%)

이 중요하게 지적되었다. 이와 비교해 보면 2004년에도 정치인 부정부패/부조리(2위, 67.6%), 정치적 무능(8위, 52.0%)이 지적된 점은 같고, 권력형 비리/관권 개입(39위, 39.6%)이 낮아졌으나 국민의 정치불신(6위, 51.5%)과 정치불안(11위, 50.1%)도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 가운데 2004년에 가장 다수가 중요하다고 지적한 높은 실업률(68.6%)은 이른바 IMF 금융위기를 겪은 직후 1999년(59.1%)보다도 중요한 사회문제로 다수가 지적했고, 1994년(39.1%)과 비교하면 더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최근에 정치적 무능(2004년, 51.3%)이 중요한 사회문제라고 본 사람들도 과반수로서 1999년 시점(50.8%)과는 유사하지만 1994년(32.0%)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실질적으로 군부 정치가 종식된 초기 김영삼 정부 시점에 비해서 최근에는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과제들이 다수 등장하면서 정치권의 해결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한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 문제와 유사하게 정치불안도 역시 최근(2004년, 50.1%)에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되었는데 1999년(37.9%)이나 1994년(27.0%)과 비교해도 현저하게 백분율이 높아졌다. 정치불신과 정치불안은 노무현 정권이후 다소 진보적 정치를 구현하려는 과정에서 보수 정당의 대통령 탄핵을 포함하여 정치 분야에서 다양한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나타난 국민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환경 분야에서는 1994년에 50% 이상이 환경오염(1위, 79.5%), 식수오염(4위, 60.8%), 산업폐기물/공장폐수처리(5위, 60.7%), 대기오염(8위, 56.0%)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지적하였으나, 1999년과 2004년에는 환경오염(1994년 1위, 78.4%; 2004년 3위, 66.6%)만 50% 이

상이었고, 나머지 문제들을 지적한 백분율이 크게 낮아졌다. 이 결과는 지난 10여년 동안 환경부의 설치를 비롯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단체, 그리고 국민이 노력하여 실질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진 점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 분야에서는 1994년도에 입시위주교육(6위, 60.7%), 교육의 창의성/사고력 개선(14위, 49.8%), 그리고 지방대 출신 취업난(15위, 49.7%)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1999년과 2004년에는 이 가운데 입시위주 교육(1999년 4위, 59.2%; 2004년 4위, 61.4%)과 지방대 출신 취업난(1999년 9위, 49.8%; 2004년 10위 50.3%)만 50% 이상이였다. 그러나 다른 두 교육문제에 대한 백분율도 시점 간 차이가 크지 않아서 실제로는 교육 영역에서 중요한 사회문제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0년간 세 시점에서 모두 상위 30위 및 50위 이내 사회문제들의 순위상관

지난 10년간 국민들이 지적한 사회문제들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2004년에 상위 30위 이내에 든 사회문제들이면서 1999년과 1994년에도 모두 30위 이내였던 사회문제들의 순위로부터 순위상관을 산출했다(표 4 참조). 그 결과, 2004년과 1999년 순위의 상관은 유의했으며($r = .56, p < .001$), 1999년과 1994년 순위의 상관도 유의했으나($r = .39, p < .05$), 2004년과 1994년 순위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r = .08, ns$). 이 결과는 매우 중요한 30개 사회문제의 백분율 순위가 5년 간격으로는 유의하여 유사성을 유지했지만 지난 10년 사이에는 순위의 유사성이 유의하지 않은 수준으로 크게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세 시점 모두에서 상위 50위 이내

표 4. 세 시점 모두 상위 30위 및 50위 이내에 포함된 문항들과 순위

30위에 포함된 사회문제들 ^a	2004	1999	1994
정치인의 부정부패	2	1	2
환경오염	3	2	1
입시위주 교육	4	4	6
지방대 출신 취업난	10	9	15
교육의 창의력/사고력 개선	16	20	14
빈부격차	17	11	30
노인소외	26	19	21
50위에 포함된 사회문제들 ^b	2004	1999	1994
국민의 정치불신	6	35	50
공무원 부정부패	12	3	38
성범죄 증가	20	32	7
물질 만능주의	24	41	19
교통체증	29	37	3
사회복지 제도 미흡	34	47	40
권력형 비리	39	16	32
지역감정 해소	40	7	42
대기오염	44	34	8
허례허식 풍조	46	13	31

a: 세 시점 모두에서 상위 30위 이내에 포함된 사회문제들

a+b=세 시점 모두에서 상위 50위 이내에 포함된 사회문제들

에 든 사회문제들의 순위상관을 분석했을 때도 이와 동일한 추세가 나타났다(2004-1999, $r = .38$, $p < .01$; 1999-1994, $r = .41$, $p < .001$; 2004-1994, $r = .14$, ns). 이 결과들은 지난 10년의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국민들이 지각한 중요한 사회문제의 내용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사회문제에 대한 연령별, 성별 및 지역별 반응 차이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연령별, 성별, 지역별로 분류하고, 사회문제별 응답 백분율에 이 변수들 사이에 상호작용 효과가 없어서 주효과와 해석이 가능한 문항들만을 선별하여 간략하게 논의하기로 한다. 특히 이 변수별 하위 집단들 가운데 백분율 크기의 순위 차이가 두드러진 사회문제들만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부록1 참조).¹⁾

연령에 따른 차이

연령별 반응의 백분율을 보면, 높은 실업률(대학생, 장년 1위), 환경오염(대학생, 장년 3위), 입시위주 교육(대학생 4위, 장년 5위), 취업난(대학생 5위, 장년 4위), 정치적 무능(대학생 7위, 장년 11위) 등으로 백분율이 높아서 중요도의 순위가 10위권인 사회문제들에서 대학생들과 장년층 간에 백분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연령대별 응답률의 순위에서는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서민 생활고(대학생 13위, 장년 7위), 국민의 정치불신(대학생 10위, 장년 8위), 신용불량자(대학생 11위, 장년 10위) 등에서는 연령대별 반응 백분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최소한 정치, 환경, 경제 문제들을 주로 포함하는 중요도 순위 10위권의 최상위 사회문제들이 연령대에 관계없이 한국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머지 사회문제들 가운데 대학생들이 장년

1) 지면의 제약으로 분류 범주간 상호작용의 해석은 이 논문에서 다루지 않는다.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표는 부록1에 실려 있다.

층보다 사회문제로서 중요하다고 반응한 빈도가 유의하게 높은 문항들은 지역간 빈부격차(대학생 12위, 장년 27위), 빈부에 따른 교육기회 불균등(대학생 15위, 장년 33위), 고교생의 과중한 공부압력(대학생 26위, 장년 51위), 학벌우선(대학생 29위, 장년 58위), 지역감정해소(대학생 35위, 장년 46위), 성폭력(대학생 24위, 장년 69위), 권력형 비리(대학생 30위, 장년 55위), 병역기피(대학생 41위, 장년 64위), 병역비리(대학생 38위, 장년 74위), 장애자에 대한 차별(대학생 36위, 장년 95위), 외모중시(대학생 44위, 장년 91위), 장애자 고용증대(대학생 46위, 장년 84위) 등이었다.

반면에, 장년층이 대학생들보다 사회문제로서 중요하다고 반응한 빈도가 유의하게 높은 문항들은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장년 44위, 대학생 89위), 의료보험제 개선(장년 26위, 대학생 123위), 가계부채 증가(장년 59위, 대학생 136위), 주택정책(장년 72위, 대학생 148위), 예절없는 사회(장년 67위, 대학생 158위), 노조의 과도한 임금투쟁(장년 83위, 대학생 149위), 부모의 권위상실(장년 86위, 대학생 197위), 민생치안(장년 122위, 대학생 198위), 높은 세금부담(장년 113위, 대학생 230위), 행정부처간 협조미흡(장년 160위, 대학생 225위), 아버지의 권위상실(장년 161위, 대학생 231위), 행정절차의 간소화(장년 157위, 대학생 245위), 전통예절교육 부족(장년 133위, 대학생 274위), 대학생 과소비(장년 180위, 대학생 246위), 날림 관급공사(장년 175위, 대학생 252위), 농산물 과다사용(장년 162위, 대학생 297위) 등이었다.

위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이 결과를 요약하면 대학생들은 주로 사회정의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로서 지역, 교육, 사회적 차별 등을 중요한 사회문제라고 지적

해서 선행연구(한덕웅, 1994; 한덕웅·강혜자, 2000)와 유사한 추세를 보인다. 반면에 장년층은 생계형 문제, 생활에 위협을 주거나 불편을 주는 문제들, 정부 정책 및 행정, 전통 예절의 상실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이 가운데 생계나 생활관련 문제들은 선행연구(한덕웅, 1994; 한덕웅·강혜자, 2000)에서도 장년층에 의해서 중요한 사회문제라고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1999년 시점에서 장년층은 생계나 생활형 문제 이외에 부유층이나 지도층의 위화감 조성, 환경과 재활용 등을 중요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한 반면에, 2004년 조사에서는 전통예절의 상실, 정부정책 및 행정상의 문제들을 중요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성별에 따른 차이

높은 실업률(남성, 여성 1위), 환경오염(남성 3위, 여성 2위), 입시위주 교육(남성 4위, 여성 5위), 취업난(남성, 여성 5위) 등 중요도가 최상위인 사회문제들에서 남녀 응답자들 간에 백분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성별 응답률 순위로 보면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서민생활고는 남성(1위)보다 여성(7위)의 응답률과 순위가 모두 높았다. 중요도 최상위 문제들 가운데 정치인 부정부패(남성 2위, 여성 3위), 국민의 정치불신(남성 9위, 여성 9위), 정치적 무능(남성 8위, 여성 13위), 신용불량자(남성 9위, 여성 14위) 등에서는 남녀 간에 응답률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서민생활고를 제외하면 중요도 순위 10위권의 최상위 사회문제들은 응답자 성별에 관계없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요도 최상위 사회문제들 이외에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문제로서 중요하다고 반응한 백

분율이 유의하게 높은 문항들은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남성 13위, 여성 47위), 지역감정 해소(남성 26위, 여성 65위), 주차난(남성 21위, 여성 67위),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남성 39위, 여성 100위), 예절없는 사회(남성 6위, 여성 154위), 종교집단의 타락(남성 124위, 여성 215위), 국가의 비전 제시 필요(남성 135위, 여성 248위), 종교단체의 부 축적(남성 14위, 여성 233위), 행정 부처간 협조미흡(남성 145위, 여성 243위), 아버지의 권위상실(남성 153위, 여성 239위) 등이었다. 반면에,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사회문제로서 중요하다고 반응한 백분율이 유의하게 높은 문항들은 경기침체(여성 10위, 남성 14위), 대입시 지옥(여성 12위, 남성 24위), 빈부에 따른 교육기회 불균등(여성 19위, 남성 29위), 물질만능주의(여성 26위, 남성 33위), 노인소외(여성 24위, 남성 35위), 생활고 비판 자살(여성 27위, 남성 48위), 고교생의 과중한 공부압력(여성 30위, 남성 47위), 사회복지제도 미흡(여성 34위, 남성 41위), 비싼 의료비(여성 36위, 남성 42위), 성폭력(여성 15위, 남성 102위), 대기오염(여성 42위, 남성 44위), 아동학대(여성 31위, 남성 107위), 장애자에 대한 차별(여성 41위, 남성 75위), 빈민층 사회정책 개선(여성 46위, 남성 80위), 청소년 성적 문란(여성 35위, 남성 119위), 장애인 고용증대(여성 39위, 남성 92위), 집단따돌림(여성 58위, 남성 68위), 생계형 범죄 증가(여성 53위, 남성 103위), 청소년 문화공간 부족(여성 64위, 남성 77위), 생활쓰레기 처리(여성 56위, 남성 99위), 청소년 범죄(여성 63위, 남성 93위), 남녀차별(여성 93위, 남성 260위) 등이었다.

남녀 간 비교에서 두드러진 현상들을 정리해 보면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서 주차난 같

은 생활형 문제, 행정이나 정부 정책에 관련된 문제들, 종교집단 비리, 그리고 전통예절 및 가부장적 권위의 상실 등을 많이 지적했다. 이는 1999년 조사(한덕웅·강혜자, 2000)에서 남성 응답자들이 주로 부정부패를 포함해서 정치에 관련되는 문제들의 순위가 여성들보다 높았던 바와 유사하다. 1999년과 달리 최근에 정치인 부정부패, 정치 불안, 정치적 무능 등 정치문제에서 성별에 따라서 백분율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이유가 정치에 대한 남성의 무관심 증가나 여성의 관심 증대와 어떤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여성들은 경제, 교육, 환경, 사회복지, 치안, 여성, 청소년, 아동, 노인 문제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사회문제 영역에서 남성들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 가운데 여성, 생활환경, 치안, 노인, 청소년 문제들을 여성들이 남성들 보다 많이 지적한 점은 1999년 조사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성폭력, 남녀차별 등의 문항에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월등히 높은 응답률을 보여서 성별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점도 1999년 조사 결과와 유사하다.

지역에 따른 차이

중요도 최상위 10개 사회문제에서는 높은 실업률(서울 1위, 지방 3위)에서 지방보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순위가 더 높은 점을 제외하고는 서울과 지방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서울지역 거주자들이 지방 거주자들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인 사회문제들은 경기침체(서울 8위, 지방 19위), 대입시 지옥(서울 11위, 지방 22위), 정치 지도자의 자질 부족(서울 15위, 지방 23위), 외교능력 부족(서울 16위, 지방 67위), 지역감정 해소(서울

22위, 지방 48위), 정부의 재정낭비(서울 35위, 지방 55위), 한탕주의 만연(서울 47위, 지방 77위),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서울 33위, 지방 100위), 정치인의 민의반영 부족(서울 50위, 지방 97위), 교육정책의 일관성 결여(서울 52위, 지방 109위), 자녀 과잉보호(서울 70위, 지방 95위), 전인교육 부재(서울 67위, 지방 138위), 대학입학제도 개선(서울 86위, 지방 124위), 기초과학 투자 미흡(서울 71위, 지방 155위), 언론의 상업주의(서울 87위, 지방 134위), 도시 휴식공간 부족(서울 85위, 지방 137위),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서울 83위, 지방 148위), 농어촌 경제의 파탄(서울 73위, 지방 166위) 등이었다.

반면에, 지방 도시의 거주자들이 서울지역 거주자들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인 사회문제들은 빈부격차(지방 13위, 서울 23위), 지역간 빈부격차(지방 15위, 서울 24위), 정치인 권력다툼(지방 17위, 서울 29위), 생활쓰레기 처리(지방 54위, 서울 115위), 약한 정부(지방 74위, 서울 136위), 인터넷 중독(지방 81위, 서울 128위), 학력간 임금격차(지방 93위, 서울 183위), 행정기관 서울 편중(지방 99위, 서울 203위) 등이었다.

지역간 차이를 요약해 보면, 서울지역 거주자들은 지방도시 거주자들에 비해서 정치, 행정, 외교, 교육 등의 영역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지역감정이나 농어촌 경제 파탄 등에서 지방도시보다 오히려 비교적 불이익이나 관련성이 낮은 서울지역 거주자들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 가운데 서울지역 거주자들이 지방도시 거주자들보다 지역감정 문제에 더 높게 반응한 점은 1999년 조사의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에, 지방도시 거주자들은 서울 지역 거주자들에 비해서 주로 소득격차와 관

련된 문제들에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특히 최근 들어 큰 관심을 끌고 있는 행정기관의 서울 편중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현저하게 큼을 알 수 있다.

한편, 영남과 호남지역 거주자들의 반응 백분율 차이를 알아본 결과에서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호남지역 거주자들이 영남 지역 거주자들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인 사회문제들은 지방대출신 취업난(호남 1위, 영남 4위), 지역간 빈부격차(호남 7위, 영남 25위),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호남 8위, 영남 62위), 지역차별 해소(호남 18위, 영남 114위), 행정기관 서울 편중(호남 57위, 영남 151위), 핵폐기물 처리장(호남 99위, 영남 256위) 등이었다. 이에 비해서 영남지역거주자들이 호남지역 거주자들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인 사회문제들은 정치적 무능(영남 6위, 호남 19위), 공무원 부정부패(영남 7위, 호남 25위), 약한 정부(영남 54위, 호남 140위), 실속없는 북방정책(영남 59위, 호남 144위), 정부의 국민 기만(영남 86위, 호남 179위), 정부의 여론조작(영남 118위, 호남 221위) 등이었다. 호남지역 거주자들이 영남지역 거주자들에 비해서 지역차별 및 지역간 불균형과 관련된 문제들을 중요문제로 지각한 점은 1999년 조사 결과와 매우 유사한데, 이는 이 지역 거주자들이 지속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1999년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영남지역 거주자들은 호남지역거주자들 보다 현 정부의 정책 및 정치적 능력과 관련된 정치문제들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본 연구의 한계와 장래 연구의 과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한덕웅, 1994; 한덕

웅, 강혜자, 2000)와 비교하기 위해서 조사의 대상을 선정하면서 통계청(2000)의 인구통계자료에서 지역, 연령, 성별에 따른 분포를 참고로 하되 유사한 표집이 되도록 할당하였다. 이 때문에 특히 20대 대학생들과 40-50대 장년층의 학부모나 친지들로 조사의 대상이 한정되었다. 이 조사의 대상들은 사회경제나 교육 수준에서도 대체로 중류 이상의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적어도 중산층이 한국사회를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사회문제를 다루었다고 볼 수 있다. 이 한계점 때문에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문제들을 알아내려면 중요한 인구통계 변인들을 고려한 조사가 요망된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심층 면접이나 초점 집단 면접(focus group interview) 등과 같은 다양한 접근법을 활용하여 주요 사회문제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배경을 추가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비록 이와 같은 한계를 지니지만, 사회문제 목록, 조사의 대상, 조사의 기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선행 연구와 비교해서 지난 10년 동안 세 시점에서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알아낸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고영복 편 (1991). *현대 사회문제*.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 통계청 통계 조사국 인구통계과 (2000). *인구센서스*: 2000.
- 최명, 권태환, 홍두승 (편) (1989). *사회조사 10년: 1979-1988*.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한덕웅 (1994). 한국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의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20-53.
- 한덕웅, 강혜자 (2000). 한국 사회에서 사회문제의 지속과 변화: 1994년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2), 15-37.
- 한덕웅, 최훈석, 강혜자, 이경성, 박군석 (1995). 한국 사회문제의 지각 차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9(1), 99-111.
- 현대사회연구소 (1993). *국민여론조사보고서*. 현대사회연구소.
- Israel, J., & Tajfel, H. (1972). *The context of social psychology: A critical assessment*. London: Academic Press.

1차 원고 접수일 : 2005. 10. 25

최종 원고 접수일 : 2006. 1. 27

Important Social Issues in Korea: Continuity and Change over 10 Years

Doug-Woong Hahn

Hoon-Seok Choi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individuals' perception of important social issues in Korea. Based on previous research(Hahn, 1994; Hahn & Kang, 2000), a checklist containing 370 social issues was created. This checklist was administered to 1600 Koreans(812 college students, 788 adults) residing in 5 regional areas in Korea during the period of December 2004 and February 2005. Data were analyzed by the respondents' age, sex, and residing areas, and findings were compared to those of the two previous studies conducted in 1994 and 1999.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ross the three surveys, over 50% of the respondents consistently indicated the following four items as important social issues in the Korean society: political corruption, environmental pollution, the education system that is driven too much for college entrance, employment difficulty for local college graduates. Second, more than 50% of the respondents in the current survey indicated the following 12 items as important social issues that must be resolved: high unemployment rate, political corruption, environmental pollution, education system, overall difficulty of getting jobs, the nation's distrust in politics, hardships of life among the working classes, political incompetence, people with defective personal credit standings, employment difficulty for local college graduates, political instability, corruption of public servants. Third, analyses on the top 30 social issues across the three surveys revealed a positive and significant rank-order correlation for a five-year period(i.e., 1994-1999, 1999-2004), but not for a ten-year period(i.e., 1994-2004). Implications of the study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Social issues, the Korean society, continuity of social issues, changess of social issues

박태원, 이. 정, 문정원, 이. 아, 박. 마, 김. 차이, 김. 정, 김. 정

[illegible]

[illegible]

연도	문헌내용	전체 (2004년)		전체 (2009년)		전체 (2014년)		지역별		A		B		C		AC		BC		ABC	
		순위	도	순위	도	순위	도	순위	도	순위	도	순위	도	순위	도	순위	도	순위	도	순위	도
204	여러개 부처	80	22.8	120	28.1	197	29.9	88	36.6	99	28.9	99	28.9	63	36.9	91	31.5	73	34.0		
173	홍수·가뭄·노수	81	22.8	46	38.9	12	50.4	96	21.1	62	31.3	69	31.8	89	31.7	88	32.2	76	33.2		
53	신생아·가뭄·노수	92	22.3	29	43.7	5	60.7	88	30.4	76	32.2	65	29.2	98	32.2	52	38.1	109	28.4		
102	과학자의 생명·생물학	83	22.2	22	45.3	21	47.6	110	29.3	62	34.0	99	29.1	77	35.0	70	35.3	56	36.2		
251	지리·자연·과학	84	22.1	126	28.5	146	31.8	94	22.0	75	32.2	87	29.1	73	35.3	100	30.6	75	33.4		
262	환경·자연·과학	85	21.5	106	28.3			104	30.8	71	32.6	142	24.8	59	37.8	97	30.9	80	32.3		
341	노수·가뭄	86	21.4	128	28.3			91	21.1	66	30.8	109	27.4	74	35.3	94	31.4	80	31.6		
90	농촌·과학·자연	87	21.3	94	31.5	27	46.4					96	28.6	85	34.0	108	29.8	79	32.4		
10	자연·생물	88	20.9	302	13.0	21	11.9	103	31.4	88	30.5	91	29.7	103	31.7	77	33.5	104	28.0		
253	자연·생물·과학	89	20.8	83	33.1	21	47.6	80	30.5	103	29.1	90	29.0	97	32.3	81	32.9	103	29.3		
265	자연·생물·과학	90	20.7	89	32.0	62	40.6	106	27.3	99	34.1	94	29.4	99	32.2	102	30.2	86	31.2		
273	자연·생물·과학	91	20.7	89	32.0	62	40.6	72	26.2	124	26.1	85	29.3	94	32.6	106	26.3	74	33.8		
17	자연·생물	92	20.6	49	38.1	207	27.8	78	34.1	114	27.0	76	30.5	109	30.8	104	30.1	87	31.0		
178	자연·생물	93	20.4	220	17.7	70	39.6	131	27.8	80	31.4	94	28.9	105	31.3	109	29.6	81	30.5		
284	자연·생물·과학	94	20.3	126	28.2	144	32.0	122	28.9	81	31.4	110	27.4	102	31.7	67	35.8	128	25.9		
319	자연·생물·과학	95	20.1			185	30.8	96	28.8	96	27.5	86	29.3	108	30.9	128	27.3	81	31.9		
209	자연·생물·과학	96	20.0	146	27.0	114	34.3	95	28.0	108	27.5	115	26.9	95	32.6	111	29.4	96	32.1		
26	자연·생물·과학	97	20.0	44	38.4	25	46.9	108	26.7	109	28.9	116	26.9	95	32.6	120	28.5	90	30.7		
286	자연·생물·과학	98	20.7	26	44.2	100	35.9	84	31.3	125	26.1	91	29.0	114	30.6	120	28.5	90	30.7		
96	자연·생물·과학	99	20.6	57	36.1	113	34.4	71	26.7	151	23.9	108	27.5	109	31.7	116	28.6	90	30.5		
64	자연·생물·과학	100	20.6	62	35.6	36	44.9	117	26.6	99	28.9	106	26.6	72	35.4	106	27.5	95	31.4		
120	자연·생물·과학	101	20.3	225	20.2	87	37.3	140	26.1	72	27.6	98	26.5	117	30.2	96	31.1	113	28.2		
113	자연·생물·과학	102	20.3	99	31.2	169	30.2	85	31.0	128	25.9	78	29.9	128	28.6	96	32.5	124	27.1		
22	자연·생물·과학	103	20.2	161	26.2	106	35.4	96	28.0	123	26.3	140	26.0	90	33.1	98	30.9	110	28.4		
206	자연·생물·과학	104	20.2	65	35.1	119	33.8	89	31.6	137	26.0	111	27.4	110	30.8	89	32.0	122	27.4		
153	자연·생물·과학	105	20.1	112	29.9	175	29.9	128	26.1	99	30.3	160	23.1	75	35.1	112	29.1	98	29.8		
148	자연·생물·과학	106	20.1	73	34.0	147	31.8	108	26.3	67	29.9	72	31.3	140	26.6	71	35.3	155	24.6		
201	자연·생물·과학	107	20.0	105	26.5	203	29.0	121	29.2	101	29.8	66	29.2	154	26.2	105	30.1	111	29.3		
20	자연·생물·과학	108	20.0	129	26.1	195	32.2	109	26.4	110	27.3	90	31.2	161	24.8	82	32.9	136	26.0		
63	자연·생물·과학	109	20.0	119	28.1	210	27.7	89	31.5	147	24.2	116	26.9	111	30.8	101	30.6	115	27.9		
154	자연·생물·과학	110	20.0	240	18.8	229	25.8	149	26.1	89	31.2	104	27.9	120	29.6	99	30.9	119	27.5		
123	자연·생물·과학	111	20.0	109	30.1	26	44.9	111	30.3	115	27.0	88	29.1	129	29.6	113	29.9	108	29.8		
19	자연·생물·과학	112	20.0	140	26.9	140	31.6	107	30.5	116	27.0	122	26.6	116	30.3	87	32.5	134	26.1		
209	자연·생물·과학	113	20.0	106	27.9	152	31.4	115	29.9	111	27.2	144	24.7	91	32.9	140	26.2	88	30.8		
207	자연·생물·과학	114	20.0	48	38.4	163	30.7	87	31.9	134	25.3	127	26.9	123	30.8	85	32.7	137	26.0		
20	자연·생물·과학	115	20.0	138	27.8	165	31.3	102	31.4	130	25.6	78	30.1	140	27.1	106	29.9	116	27.7		
20	자연·생물·과학	116	20.0	70	34.6	57	41.5	137	27.3	94	29.6	105	27.9	124	29.0	117	29.6	112	28.3		
20	자연·생물·과학	117	20.0	61	35.6	66	40.0	103	31.4	131	25.6	123	26.4	115	30.6	144	26.0	94	30.3		
20	자연·생물·과학	118	20.0	187	22.3	215	27.3	144	26.4	90	30.3	177	20.0	96	34.0	107	29.9	123	27.3		
20	자연·생물·과학	119	20.0	115	28.5	24	47.3	126	26.3	105	27.9	113	26.4	118	30.2	83	32.9	140	25.0		

[illegible]

[illegible]

연도	분류대응	전체 (2004년)		전체 (1994년)		전체		핵심		전통		지역별		AC AREA		
		승원	모	승원	모	승원	모	승원	모	승원	모	승원	모			
1857	국가보안법	200	21.0	21.1	20.9	197	22.3	175	23.2	224	19.8	204	21.1	198	20.9	20
318	경찰청 모범관	202	21.0	162	26.1	177	31.1	196	22.0	207	21.1	212	19.2	193	22.8	21
75	수출물류관리법	202	21.0	162	26.1	177	31.1	246	21.1	257	23.6	150	24.2	249	17.9	19
40	국회법	204	20.9	147	14.3	134	32.3	218	20.3	196	21.5	190	21.1	211	21.1	20.8
100	국회법(국회법) 개정	204	20.9	20.9	19.6	116	34.2	213	20.9	199	21.7	172	22.4	227	19.5	19.8
167	국회법 개정	205	23.8	125	28.7	168	34.3	220	20.2	189	21.3	167	22.8	226	18.5	20.3
110	국회법(국회법) 개정	206	20.6	127	28.4	63	40.2	224	19.8	171	23.6	240	17.1	178	24.0	20.6
159	국회법(국회법) 개정	207	20.5	109	21.4	188	29.1	178	21.0	214	19.0	196	20.3	209	20.8	20.3
169	국회법(국회법) 개정	208	23.6	227	29.2	193	29.1	215	21.7	204	23.2	173	22.6	240	18.6	18.3
141	국회법(국회법) 개정	209	20.5	206	21.6	142	32.0	224	19.5	133	25.4	181	21.7	220	19.3	20.8
54	국회법(국회법) 개정	210	20.5	252	17.3	122	33.4	216	20.7	201	23.4	242	17.1	177	21.7	21.1
137	국회법(국회법) 개정	211	23.4	238	14.2	296	16.9	187	21.5	232	18.3	189	21.2	225	19.6	21.5
200	국회법(국회법) 개정	212	20.4	215	20.9	96	36.4	201	21.7	220	19.0	199	20.1	216	20.6	20.5
202	국회법(국회법) 개정	213	20.2	213	20.9	91	37.1	200	21.8	225	18.3	211	19.3	208	21.0	21.7
119	국회법(국회법) 개정	214	23.2	241	18.9	234	18.8	189	21.7	229	17.8	218	19.5	184	21.9	21.5
257	국회법(국회법) 개정	215	19.9	141	17.3	161	30.8	246	19.1	190	21.8	216	19.8	207	21.0	18.9
257	국회법(국회법) 개정	216	19.9	117	11.6	224	18.9	204	21.6	229	18.7	228	14.5	169	24.9	20.8
223	국회법(국회법) 개정	218	19.8	124	20.8	78	33.1	202	21.7	236	17.9	228	19.6	221	20.0	20.1
195	국회법(국회법) 개정	219	19.8	76	31.8	75	38.4	221	20.2	212	19.3	232	20.0	228	19.5	19.7
348	국회법(국회법) 개정	220	19.7	110	30.2			219	20.3	214	19.2	229	17.9	188	21.5	17.6
183	국회법(국회법) 개정	221	19.6	75	33.9	98	36.3	250	17.2	175	21.0	204	19.9	230	19.4	19.6
57	국회법(국회법) 개정	222	19.6	302	22.9	22.9	25.0	191	22.8	259	16.1	198	22.7	202	16.7	17.7
58	국회법(국회법) 개정	223	19.5	82	31.2	46	41.1	240	19.2	194	23.9	259	17.3	203	19.8	17.4
59	국회법(국회법) 개정	224	19.2	195	21.9	137	32.2	227	19.5	208	20.1	227	17.3	210	20.9	21.8
236	국회법(국회법) 개정	225	19.1	247	18.5	10	51.4	205	21.6	251	16.8	250	16.5	196	21.6	22.8
276	국회법(국회법) 개정	226	19.1	142	27.2	228	25.5	213	21.4	226	19.7	226	17.5	214	20.7	23.1
275	국회법(국회법) 개정	227	19.0	167	30.3	81	37.8	226	19.3	223	19.2	203	16.2	197	21.6	20.5
136	국회법(국회법) 개정	228	19.9	145	27.1	157	31.0	226	19.7	215	19.2	222	19.3	226	19.6	22.8
317	국회법(국회법) 개정	229	19.8	284	14.2	248	23.5	189	21.2	282	16.9	229	14.5	182	23.0	19.5
158	국회법(국회법) 개정	230	19.6	129	26.3	118	34.1	217	20.6	268	16.9	281	15.7	283	21.4	22.9
237	국회법(국회법) 개정	231	19.3	191	21.0	182	29.6	297	19.6	162	21.4	271	14.8	201	21.5	24.6
292	국회법(국회법) 개정	232	19.3	195	22.6	165	35.5	210	21.2	268	15.2	203	20.1	264	16.6	18.4
292	국회법(국회법) 개정	233	19.3	226	20.5	235	21.5	214	20.8	263	15.7	225	19.1	244	19.3	21.1
292	국회법(국회법) 개정	234	19.2	307	12.6	306	15.1	224	19.7	263	16.6	226	17.3	234	19.0	22.9
118	국회법(국회법) 개정	235	19.1	188	23.4	185	29.6	238	21.7	272	14.9	265	14.9	265	21.2	22.5
305	국회법(국회법) 개정	236	19.1	197	23.4	185	29.6	238	21.4	268	14.0	265	15.3	212	20.8	19.5
40	국회법(국회법) 개정	237	19.0	319	11.2	289	16.6	226	19.4	216	19.0	266	12.4	193	21.3	27.4
109	국회법(국회법) 개정	238	19.0	147	27.2	218	27.1	194	21.2	288	14.0	267	14.0	196	21.9	22.0
252	국회법(국회법) 개정	239	17.9	250	19.1	229	22.9	229	15.6	293	20.3	229	17.3	241	19.5	24.1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부록2. 2004년도 반응 백분율 50% 이상의 사회문제들 가운데 세 시점에서 모두 조사가 이루어진 10개 중요 사회문제들의 백분율 추이

